

보도자료

호주 현지서 논란 계속되는 SK E&S 바로사 가스전 사업

호주 현지 환경단체의 가스전 개발 사업 반대 청원, 1000명 넘어서
SK E&S가 계획하는 탄소포집저장(CCS), 온실가스 감축효과 16%에 불과
COP26에서 세계 33개국은 “공적 금융 화석연료 투자 중단” 선언

호주 북부 티모르(Timor) 해역에서 SK E&S가 추진 중인 약 37억 달러(약 4조 원) 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의 환경 피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월 최종투자결정(FID)이 나온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자금 조달을 거친 후 2025년부터 약 20년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 예측량에 국내외 환경단체와 현지 시민의 우려를 꾸준히 받고 있다.

지난 9월 호주 주빌리 연구소(Jubilee Research Center), 노던 준주 환경센터(ECNT), 일본 환경지속사회연구센터(JACSES), 기후솔루션은 SK E&S에 바로사 가스전 개발을 멈추어야 한다는 '[스탑 바로사 가스\(Stop Barossa Gas\)](#)'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했다. 캠페인은 바로사 가스전의 환경적 문제는 물론, 호주 북부 티위 섬의 원주민들을 포함한 인근 지역사회 및 해양 생태계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밝히며,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서 SK E&S 철수를 요구하는 청원 동참을 독려했다.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국제 시민이 캠페인에 참여해 SK E&S측에 사업 반대 서한을 보냈다.

주빌리 연구소의 디나 루이(Dina Rui) 캠페인 디렉터는 “호주는 기후변화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는 나라 중 하나”라며 “특히 2019~2020년 남동부 해역으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이후 실시된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들 과반이 신규 가스 사업에 반대할 정도로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SK E&S는 이 사업에 탄소포집저장(CCS)을 적용할 계획이므로 '친환경' 사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통해 생산, 액화, 수송, 기화, 소비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연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이 1350만톤에 달하며 이 가운데 CCS를 통해 포집할 수 있는 양은 21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현재 SK E&S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포집·저장되는 양은 전체의 16%에 불과하여 CCS가 적용된다고 해도 신규 가스전 개발 사업은 막대한 온실가스의 추가 배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신규 화석연료 개발 사업 중단이 가장 우선순위로 꼽히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탄소포집저장(CCS)의 경제성과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 202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CCUS는 전체 연간 4000만톤 규모로, 이 중 75%가 경제성 확보를 위해 포

2021년 11월 23일 배포 (즉시 보도 가능)

집된 이산화탄소를 추가 석유·천연가스 추출에 재이용하는 원유회수증진(EOR) 사업일 만큼 순수하게 탄소포집 및 저장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흔치 않은 상황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바로사 가스전의 CCS 사업에만 최소 16억 달러(1.8조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총 사업비용인 37억 달러(4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비용이 온실가스의 일부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로사 가스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공적 금융 지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지난 4일 호주의 주빌리 연구센터는 G20 국가 중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전 세계 3번째로 호주의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3개국이 호주 화석연료 개발에 투자한 공적금융은 약 280억 호주달러(약 24조 2000억원)며, 이 중 한국은 46억 호주달러(약 4조원)를 지원했다. 호주 현지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되고 있는 한국 공적금융의 해외 투자액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되는 것보다 12배가 더 많은 만큼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리스크도 커진다는 지적이다.

탈석탄에 이어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제한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지난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덴마크,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33개국이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투자를 중단한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 전 세계 해외 화석연료 투자를 주도해온 만큼 수출입 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공적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국제적 우려의 시선은 이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SFO°C
Solutions for Our Climate